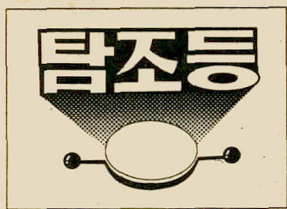


이번 15대 총선에서 여성은 지역구에서 2명, 전국구에서는 7명이 당선되어 총 9명(전체 2백99명의 3.0%)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14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총 6명(전체의 2.0%)에 불과했다. 그중 지역구 의원은 단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철언씨 부인밖에 없었다. 그리고 14대 국회의 출범시 여성 의원은 3명밖에 없었고 2명은 나중에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 받았다. 또한 제헌국회 이후 역대 여성의원수는 평균 4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종래의 상황과 비교하면 15대 총

로 재직하면서 시국사건들은 소신있게 처리해 왔다. 김영선씨(36·신한국당 전국구)는 변호사이며 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정희경씨(63·국민회의 전국구)는 교육학 교수, 교장을 역임했으며 197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 때 홍일점으로 활동했다.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지역구 후보로서 낙선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구성이 극심한 성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의 구성이 자본가나 기업인,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편중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입법이나 의정활동이 기대될 수 없듯이, 이러한 성별 불균형 구조에서는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나 남녀평등의 실현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여성들의 삶의 문제와 목소리가 균형있게 그리고 실감있게 고려될 수도 없을 것이다. 최근 UN에서는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의 권한척도를 발표했다

15대 총선과 여성의원

선의 결과는 여성 정치참여의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명의 여성이 지역구에서 현역의원을 포함한 남성후보들을 제치고 1등으로 당선된 것은 여성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회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10년전 2대 총선(1985년)에서도 2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지만, 이때는 선거구마다 2명까지 뽑는 제도에서 모두 2등으로 당선된 것이며 13대, 14대 총선에서는 한명의 여성도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단체장 출신이 3명, 법조인 출신이 2명, 여성정책담당 장관, 교육행정전문가, 언론인, 정당인 출신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전보다 더욱 여성문제에 관한 의정활동이 전문적이고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자씨(59·신한국당 전국구)는 동아일보 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무(제2)장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경씨(45·민주당 전국구)는 민족·민주·민중운동과 더불어 여성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거의 10년간 이끌어 왔다. 신낙균씨(55·국민회의 전국구)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유권자의식의 제고를 추구하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중추적 활동을 하였다. 오양순씨(51·신한국당 전국구)는 전북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여약사회장을 역임했다. 추미애씨(38·국민회의 지역구)는 광주지법 판사



김엘림

국민회의 선대위 공동의장과 전국구 후보 1번을 배정받았다. 임진솔씨(55 무소속)는 기자, PD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10대, 13대, 14대, 15대 총선에서 계속 지역구에 입후보하였다가 이번에 드디어 숙원을 이루었다. 한영애씨(54·국민회의 전국구)는 김대중총재와 동고동락을 오랫동안 같이 한 여성당직자로서 13대, 14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였다가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등원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여성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활동을 보여왔는지 여성관계법이나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문제에 관한 의정활동에 주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국민과 유권자 중 여성의 수가 반수를 넘는데도 여성의원이 전체의 3.0%(지역구 의원은 0.9%)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회의 인적

데, 우리나라는 1백11개국 중 90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법이나 종교율법으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회교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 최하위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소되어야 한다. 구미제국에서는 법령이나 정책, 정당의 정강에 의해 국회의원의 구성이나 후보자 선정시 한쪽 성이 적어도 30~40%이상 분포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도 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공천할당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회의를 제외한 다른 정당은 여성의 공천에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어떠한 지원이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정당에서 공천하고 싶고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싶은 여성정치인들 많이 양성되고 여성들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감정과 금권정치, 연고주의, 폭력과 흑색선전이 판치는 선거풍토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의 국회진출을 어렵게 만든 소선거제 최다득표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